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헌법 모의고사 및 해설(3)

| 고영동 교수 | 박문각 경찰학원



11. 노동관계법의 벌칙규정에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범죄의 실질적 내용이 '법률'이 아닌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 노동단체는 어떤 논거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① 미란다(Miranda) 원칙
- ② 신뢰보호의 원칙
- ③ 죄형법정주의
- ④ 무죄추정의 원칙

[정답] ③

【해설】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 ■ 난이도 중
③ (X)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 협약에 …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 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 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현재 1998.3.26. 96헌가20).

12. 현행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무죄추정의 원칙
- ②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 ③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 ④ 보석제도

[정답] ④

【해설】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 ■ 난이도 하
④ 보석제도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법(제94조~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① 헌법 제27조 제4항
② 헌법 제12조 제2항
③ 헌법 제12조 제7항

13. 주거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정한 주거에 거주함으로써 그 장소로부터 사생활 상의 편의를 얻는 자는 누구나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 ②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③ 주거의 '침해'라 함은 거주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거주자의 의사에는 명시적인 것은 물론이고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 ④ 주거 내에 설치된 도청기를 사용하여 회화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자유권적 기본권 – 주거의 자유 ■ 난이도 하
② (O)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6조).

- ④ (X) 기술적 보조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주거 내에 설치된 도청기를 사용하여 회화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주거의 자유의 침해가 인정된다(대판 1997.3.28. 95도 2674).

14.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한다.
- ②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이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된다.
- ③ 거주·이전의 자유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④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중·고등학교 입학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열된 입시경쟁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부모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③

【해설】 자유권적 기본권 – 거주·이전의 자유

■ 난이도 하

③ (X) 거주, 이전의 자유는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자연인과 국내법인이 그 주체가 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은 그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수설).

④ (O)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112조의6 등의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위 시행령에 상당히 마련되어 있어서 그 입법수단은 정당하므로, 위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현재 1995.2.23. 91헌마 204).

15.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할 때,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목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 ②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③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④ 전투경찰순경이 법률에 근거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시위진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자유권적 기본권 – 양심의 자유 ■ 난이도 중

③ (X)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지적(前置的) 조치라고 인정되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는 것은 법률이 운전자에게 부과한 정당한 의무라고 할 것이고 법률이 부과한 이러한 정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이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현재 2004.12.16. 2003헌바87).

④ (O) 일반적으로 불법한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기본 임무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고, 경찰관은 누구나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파견되거나 경찰기동대로 편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불법한 집회 및 시위로 말미암아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경찰의 본래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위진압명령을 한 것이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현재 1995.12.28. 91헌마80).

16.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언론·출판의 자유는 알 권리와 반론권을 포함한다.
- ②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③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은 외국 영상물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자유권적 기본권 – 언론·출판의 자유

■ 난이도 하

③ (X)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 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도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현재 2005.2.3. 2004헌가8).